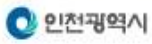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18일 총 3매		
담당 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 유형문화유산담당 오정근 ☎440-4481 • 담당자 유성대 ☎440-4032		
<b>사진</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 한다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  
-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 보조금 지원 등 혜택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사례가 발생하여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업무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 인천은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2019.12.25.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맞춰 작년에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제1호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우선, “시 등록문화재 후보리스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에 등록할 문화재 등록 신청서류를 3월 26일까지 접수한다.
- 또한,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3월중 “등록문화재 제도 홍보물(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4월에는 문화재위원,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시 등록문화재 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소유자가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조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된다.
-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혜택은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시와 군·구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세제감면 및 유예 등이 있다

-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 없이 소유자가 활용이 가능함으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되어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